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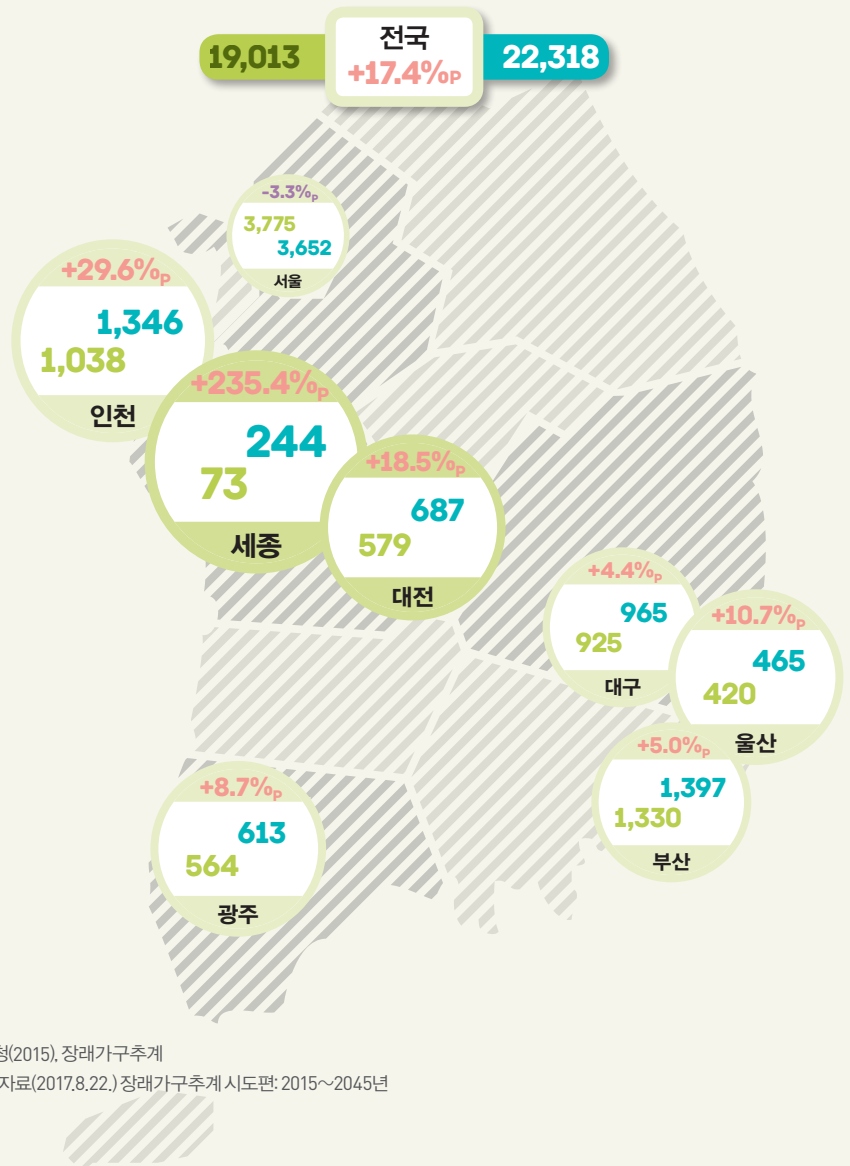


2015년 대비 2045년 대전시 가구수 18.5% 증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부터 2045년까지 30년간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15년 총가구는 1,901만3천 가구에서 2045년 2,231만8천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8개 특·광역시 총가구 추계를 살펴보면, 서울(377만5천→365만2천), 부산(133만→139만7천), 인천(103만8천→134만6천), 대구(92만5천→96만5천), 대전(57만9천→68만7천), 광주(56만4천→61만3천), 울산(42만→46만5천), 세종(7만3천→24만4천) 순으로 추정된다. 2015년 대비 2045년에는 서울(-3.3%)을 제외한 7개 특·광역시의 가구수는 증가할 전망이다이며, 특히 세종은 2015년에 비해 2045년 235.4%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가폭이 가장 컸다. 대전의 증가폭(+18.5%)은 인천(+29.6%) 다음 세 번째로 높게 예측됐다.

전국 및 8개 특·광역시 총가구 추계

■ 2015년 ■ 2045년 단위: 천가구



-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추계는 최근의 가구변동 추이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이 실현되었을 때 예상되는 가구에 대한 전망치임.
- 향후 사회·경제·정책적인 환경변화 및 사회적 행동 양식 변화에 따라 전망치와 실적치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추계결과의 불확실성이 증가함.
- 장래가구추계의 2015년 기준가구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와 차이가 있음.
- 자료의 기준시점이 가구추계는 7.1일이나, 인구주택총조사는 11.1일임.
- 장래가구추계의 기준가구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성·연령별 가구수(전수)에 혼인상태별 분포(표본)를 반영함.
- 일부 통계 수치는 반올림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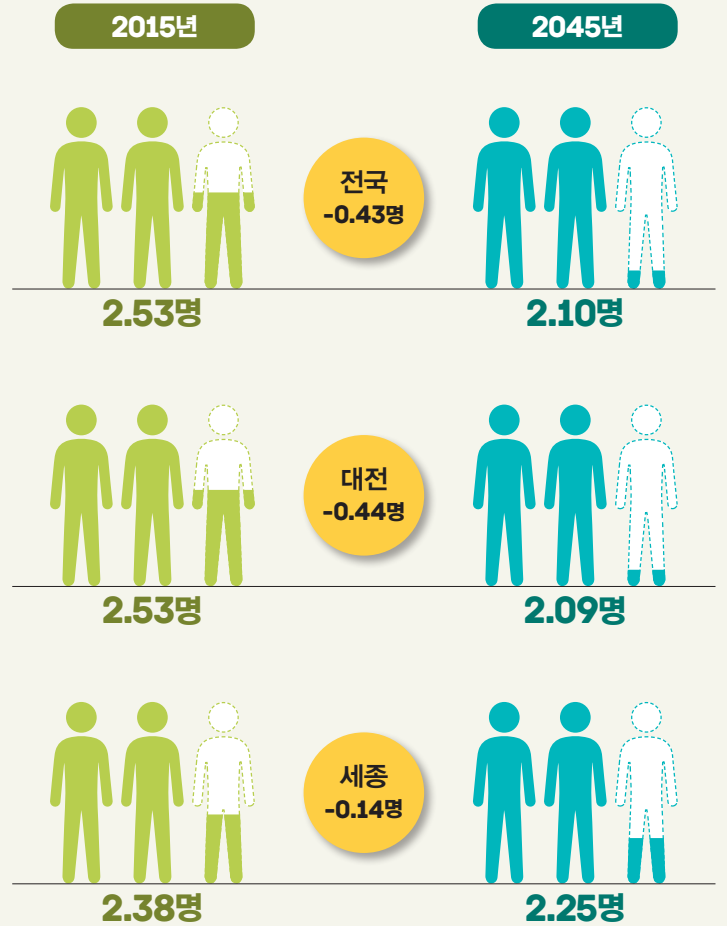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2015), 장래가구추계
통계청 보도자료(2017.8.22.)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15~2045년

대전 평균가구원수 줄어, 30년 뒤 2.09명

2015년 전국의 평균가구원수는 2.53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2045년 2.1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과 세종의 평균가구원수를 살펴본 결과, 대전은 2015년 2.53명에서 2045년 2.09명까지 줄어들어 2015년 대비 2045년 0.44명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됐다. 세종은 2015년 2.38명에서 2045년 2.25명으로 0.14명 줄어 타 시·도와 비교해 감소폭이 다소 작았다.

*출처: 통계청(2015), 장래가구추계
통계청 보도자료(2017.8.22.)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15~2045년

전국 및 대전·세종 평균가구원수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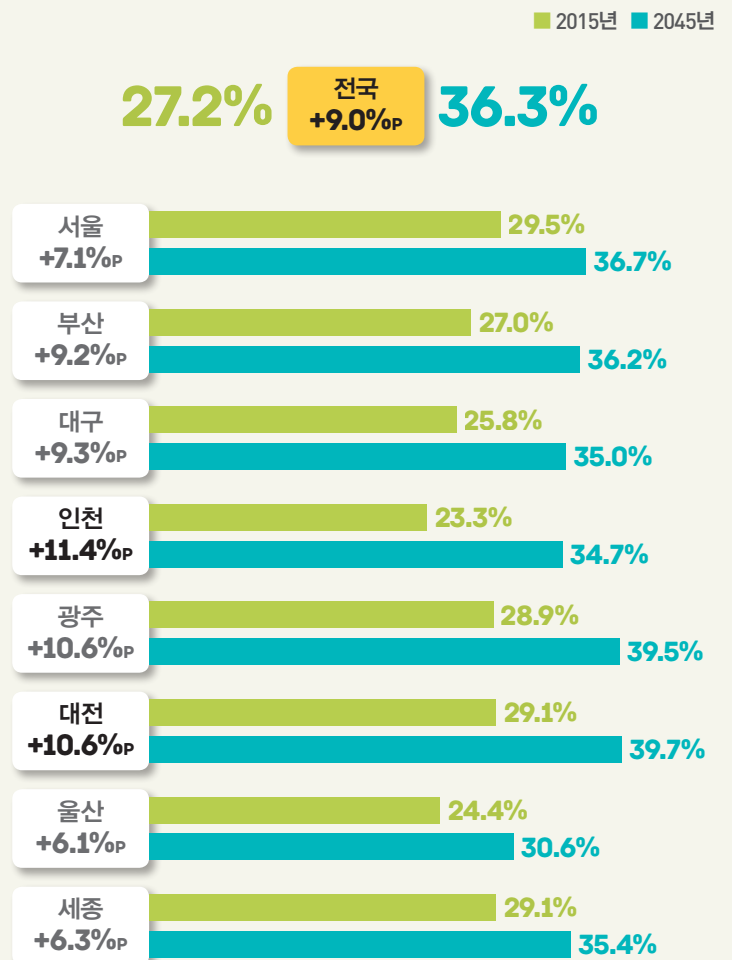


2045년 대전 나홀로 1인가구 급증, 2015년 대비 10.6%p 상승

전국의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비중은 2015년 27.2%에서 2045년 36.3%로 9.0%p 증가할 전망이다. 향후 30년간 특·광역시에서 모두 1인가구 비율은 증가하며, 대전은 2045년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1인가구 비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증가폭을 살펴보면, 인천은 2015년(23.3%) 대비 2045년(34.7%)에 11.4%p 증가해 가장 큰 폭의 변화가 예측된다. 이어서 대전(29.1%→39.7%, +10.6%p), 광주(28.9%→39.5%, +10.6%p), 대구(25.8%→35.0%, +9.3%p), 부산(27.0%→36.2%, +9.2%p), 서울(29.5%→36.7%, +7.1%p), 세종(29.1%→35.4%, +6.3%p), 울산(24.4%→30.6%, +6.1%p) 순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됐다.

*출처: 통계청(2015), 장래가구추계
통계청 보도자료(2017.8.22.)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15~2045년

전국 및 8개 특·광역시 1인가구 추계



30년 후 대전 1인가구 대세, 부부+자녀가구 앞질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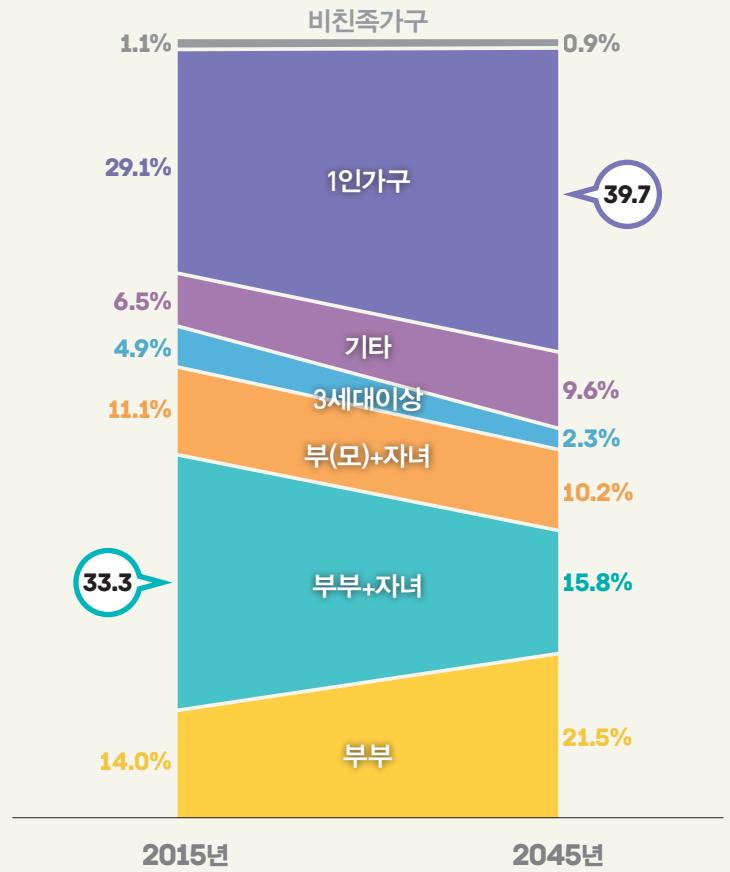
통계청 장래추계가구에 의하면 2015년 대전의 가구유형은 부부+자녀가구가 33.3%(19만3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1인가구 29.1%(16만9천), 부부가구 14.0%(8만1천), 부(모)+자녀가구 11.1%(6만4천), 기타 6.5%(3만8천), 3세대 이상 4.9%(2만8천), 비친족가구 1.1%(6천) 순이다. 반면 2045년에는 1인가구가 39.7%(27만3천)로 가장 주된 가구유형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그 다음으로 부부가구 21.5%(14만8천), 부부+자녀가구 15.8%(10만9천), 부(모)+자녀가구 10.2%(7만), 기타 9.6%(6만6천), 3세대 이상 2.3%(1만6천), 비친족가구 0.9%(6천) 순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기타는 부부+부모, 조부모+손자녀 등을 포함.

*출처: 통계청(2015), 장래가구추계
통계청 보도자료(2017.8.22.)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15~2045년

대전시 가구유형별 추계가구

단위: %



2045년 대전 가구주 절반, 60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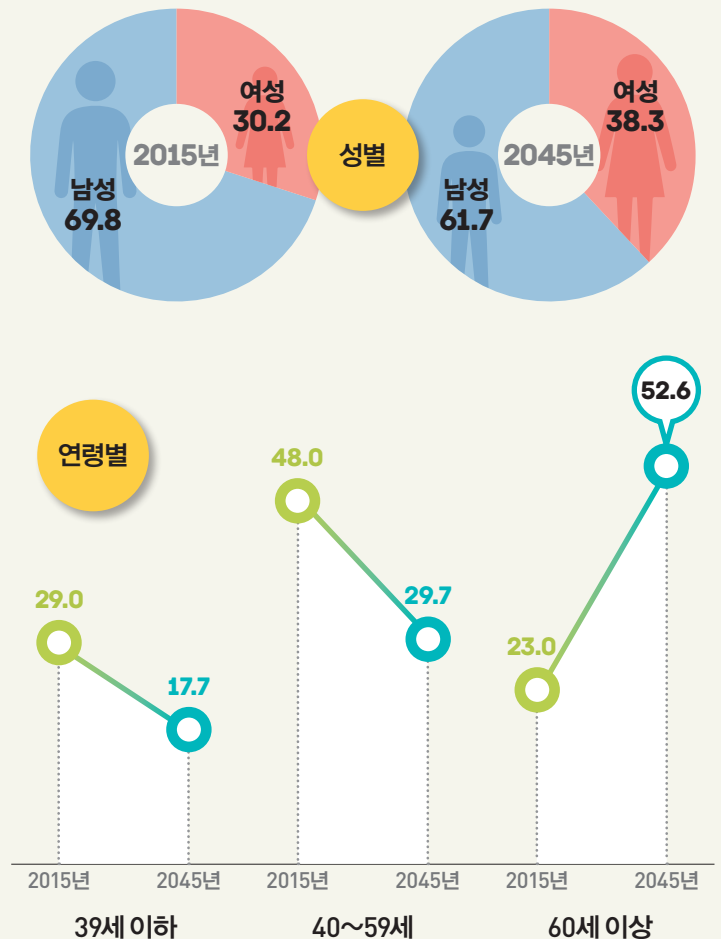
2015년 대전의 여성 가구주는 17만5천 가구(전체 가구의 30.2%)이며, 남성 가구주는 40만5천 가구(전체 가구의 69.8%)를 차지한다. 2045년까지 대전의 남성 가구주 비율은 61.7%(42만4천)로 줄어드는 반면, 여성 가구주 비율은 38.3%(26만3천)로 늘어나 2015년보다 8.2%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별로 보면, 2015년에는 40~59세 가구주 비중이 48.0%로 가장 높고, 39세 이하 29.0%, 60세 이상 23.0%로 나타났다. 그러나 2045년에는 60세 이상 가구주 비중(52.6%, 2015년 대비 +29.6%p)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다음으로 40~59세(29.7%), 39세 이하가 17.7%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출처: 통계청(2015), 장래가구추계

통계청 보도자료(2017.8.22.)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15~2045년

대전시 가구주 성별·연령별 추계가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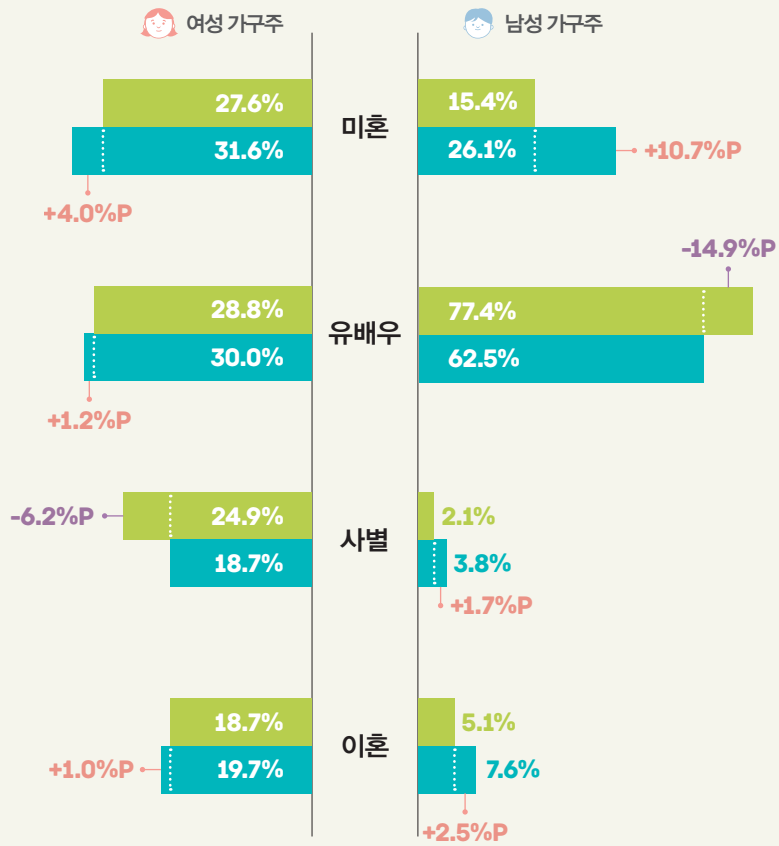
30년 뒤 대전 미혼가구 늘어, 여성 31.6%, 남성 26.1%

가구주 성별·혼인상태별 추계가구를 보면, 2015년 대전의 여성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비율은 유배우가 28.8%로 가장 많고, 이어서 미혼(27.6%), 사별(24.9%), 이혼(18.7%) 순이다. 2045년에는 미혼가구(31.6%)가 2015년에 비해 4.0%p 증가함으로써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사별가구는 6.2%p 감소함에 따라 가장 낮은 비중(18.7%)을 차지할 전망이다. 남성 가구주의 혼인상태는 유배우(77.4%→62.5%), 미혼(15.4%→26.1%), 이혼(5.1%→7.6%), 사별(2.1%→3.8%) 순으로 변화할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남성 유배우가 구비중은 14.9%p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출처: 통계청(2015), 장래가구추계
통계정보도자료(2017.8.22.)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15~2045년

대전시 가구주 성별·혼인상태별 추계가구

■ 2015년 ■ 2045년



2017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교육워크숍 및 중간보고회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지난 9월 5일 모니터단을 모집하고 모니터링 방법, 선진국 사례 등에 관해 교육워크숍을 개최했다. 모니터단은 교육 수요 후 선정된 자치구별 골목길 보행자 안전 취약 지역에 대해 현장 방문 및 이용자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중간 점검이 9월 20일 있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모니터링 경험에 있는 멘토를 초빙하여 경험을 나누고, 성인지적 정책 개선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는 최종 결과 발표회는 11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교육워크숍



중간보고회

2017년 대전시청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 대면 컨설팅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지난 9월 11~12일 대전광역시 본청의 사업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 대면 컨설팅을 진행했다. 일자리, 안전, 돌봄 영역에서 대전시의 성평등을 확산하기 위해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은 체크리스트, 전문가 자문, 사업부서 내부 협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승인 등의 정밀한 과정을 거쳐 총 128개로 확정되었다.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컨설팅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완료된 9월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진행했다.

